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1호
정보보호 법제 동향

<table>
<thead>
<tr>
<th>이창범</th>
<th>강이석</th>
</tr>
</thead>
<tbody>
<tr>
<td>· 팀장/법제분석팀</td>
<td>· 주임연구원/법제분석팀</td>
</tr>
<tr>
<td>· <a href="mailto:happyday@kisa.or.kr">happyday@kisa.or.kr</a></td>
<td>· <a href="mailto:kis@kisa.or.kr">kis@kisa.or.kr</a></td>
</tr>
</tbody>
</table>

본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강이석 주임연구원 (405-4738, kis@kisa.or.kr)
### 조사 대상

1. 국내 6월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17 입법예고, 7.6 공고마감)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 입법예고, 6.22 공고마감)

(2)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2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9.5.26 분방위 회부)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24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09.6.25 법사위 회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22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9.6.23 분방위 회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18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6.19 분방위 회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5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09.6.16 행안위 (관련위: 정보위) 회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8 홍사덕 의원 대표발의, 2009.6.9 분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일명 Loppsi)」국무회의 제출 (2009.5.27)
-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Hadopi)」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판단

□ 독일

-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s Datenschutzaudits und zur Änderung datenschutzrechtlicher Vorschriften)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인터넷상의 교사평가 (판례번호: BGH, Urteil vom 23.06.2009 - VI ZR 196/0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영국

- 「개인정보관리 표준(BS 10012: 2009)」을 제정 (2009.6.9, 영국표준협회(BSI))

□ 유럽

-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채택 (2009.5.29,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유럽회의(COE) 컨퍼런스)
목  차

Ⅰ. 국내 입법 동향 ................................................................. 1

Ⅱ. 해외 입법 동향 ................................................................. 10

Ⅲ. 판례 및 사례 ................................................................. 14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15

<참고문헌> ............................................................................. 17
1. 입법예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2009.6.17 입법예고, 2009.7.6 공고마감)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2009.6.17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 2009.7.6 공고마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함
○ 행정처제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 입법예고, 6.22 공고마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 2009. 6. 2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 2009. 6. 22 공고마감

□ 개정이유

○ 「정보화촉진 기본법」개정안이 공포(2009. 5. 22)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

□ 주요내용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안)」

○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함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심의의견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함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규정함

-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의 정보공동활용 등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등의 일반적 책무를 규정함
○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의무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을 현행과 같이 규정함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안)」

○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안)」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양식을 규정함

※ 출처 : 법제처 (http://www.mopas.go.kr/)
2. 국회 제출된 법령

|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 □ 추진현황 |

○ 2009.6.25 민주당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009.6.26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 제안이유

○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자살증후군(自殺症候群)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을 미화·유도 또는 조장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을 미화·유도 또는 조장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7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추진현황

○ 2009.6.24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2009.6.25 소관위인 법사위 회부

□ 제안이유

○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E-Mail)이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써 형사소송법상 “물건”으로 간주되어 분량이나 기간의 제한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
○ 따라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전자우편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의 정의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E-Mail 감청)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를 즉시 폐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9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22 국회발의, 2009.6.23 문방위 회부)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2009.6.22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 2009.6.23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
○ 하지만 이용자로 하여금 적시성있는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미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적시성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 상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18 국회발의, 2009.6.19 문방위 회부)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2009.6.22 민주당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2009.6.23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 제안이유

○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감시 및 차단체제 운영 등 자율규제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제공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4조의8 신설)
○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도박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복표 또는 투표권 등을 발매하거나 중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1조)
○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제공자가 당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는 자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3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정보보호 법제 동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5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2009.6.15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 2009.6.16 소관위인 행안위에 회부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함(제3조 및 제4조 삭제).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괄관리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 발전적 방안 모색 및 사이버침해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정보보호책임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마련함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8 국회발의, 2009.6.9 문방위 회부)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2009.6.8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 대표발의
○ 2009.6.9 소관위인 문방위에 회부됨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 판단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해외 입법 동향

1. 프랑스,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Loppsi)」 국무회의 제출 (2009.5.27)

□ 배경 및 경위

○ 프랑스 내무부장관은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일명 Loppsi)을 2009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 제출

□ 주요 내용

○ Loppsi 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전자커뮤니케이션을 감시하기 위한 스파이웨어를 직접 또는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와 같은 조치는 매우 엄격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허용됨. 예심판사 (juge d’instruction)는 행정기관의 감시방식, 감시장소 및 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됨

○ Loppsi 법률안은 행정결정에 따라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야할 의무를 가짐. 동 목록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음. 동 법률안은 우선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이트 접속 차단의 대상으로 할 예정임

□ 시사점

○ 동 법률안은 프랑스 정부의 2009-2013년에 걸쳐 진행되는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서 사이버범죄 척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Franse,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Hadopi)」
헌법위원회 심판

□ 배경 및 경위

○ 2009년 6월 1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는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projet de loi relatif a la 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일명
HADOPI 법률)」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하였음

□ 주요 내용

○ 헌법위원회는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삼진 아
웃제(인터넷이용 중단조치)’라 불리는 ‘단계적 대응조치’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 헌법위원회는 오늘날 인터넷 보편화에 따라 인터넷이 민주사회에의 참여와 사상
및 견해 표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 자유는 인터넷 서비스 접속의 자
유를 포함한다고 보았음
- 헌법위원회는 동 법률이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 무죄
추정원칙)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판함. 동 법률은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다운로
드를 한 것으로 적발된 IP주소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헌법위원회의 심판은 유럽의회가 지난 5월 6일 채택한 「커뮤니케이션 팩
(paquet telecommunication) 개정(안) 138」과 일맥상통. 유럽의회는 동 개
정안에서 법원의 사전 결정 없는 인터넷 이용 중단 조치에 반대한 바 있음
○ 헌법위원회의 심판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동 법
률에 추가할 예정임

※ 출처: ZDNet France (http://www.zdnet.fr)
독일,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

☐ 배경

○ 연방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청의 Peter Schaar는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의 이용은 해당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Schaar는 자신의 2007년과 2008년 활동보고서(BT-Drs. 16/12600)에서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에 대하여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개정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연방의회가 2009년 4월 23일 공표하였음

☐ 주요경과 및 내용

○ 연방 내무부가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부처안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광고 목적 및 시장조사 또는 여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오로지 해당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Opt-In) 허용된다고 함 (2008년 10월 22일)
○ 부처안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원투원마케팅(Dialogmarketing) 협회와 연방통신거래협회는 다른 여러 기업들과 공동으로 감독옵션(Auditoption)을 제안하였음. 자발적으로 정보보호감독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당사자의 형식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임 (2008년 10월 27일)
○ 연방 정부는 연방 내무부 장관이 제출한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결의하였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소위 리스트 특권(Listenprivileg)을 폐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정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행히 기업이 정보를 조심스럽게 취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인증표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함 (2008년 12월 10일)
○ 연방 상원은 상원 위원회의 권고를 참작하여 연방정부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음. 연방 상원은 연방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법률안은 기업에 현존하
는 정보보호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함(2009년 2월 13일)
○ 연방 상원의 견해 표명에 대하여 연방 정부는 반대 의견을 연방 의회에 제출하였음 (2009년 2월 18일)
○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의 법률안을 제1독회에서 다루었고 이를 다시 보다 상세한 심의를 위해 소관 위원회로 이첩하였음 (2009년 3월 19일)
○ 연방 의회 법사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정보보호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는 연방 정부안에 규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였고 출판업자 및 통신판매단체의 대표들은 Opt-Out 방식을 Opt-In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였음. 이 공청회에서는 이 외에도 녹색 연합(Bündnis 90/Die Grünen)의 2개 안 및 FDP의 안에 대하여도 토론을 하였음 (2009년 3월 23일)
○ 연방보호청장인 Peter Schaar은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오로지 해당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Schaar는 2007년 및 2008년도 자신의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의 법률안을 추가적인 삭제 없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고 연방의회가 발표(2009년 4월 23일)

### 판례 및 사례

#### 1 독일, 인터넷상의 교사 평가

□ 판례번호
- BGH, Urteil vom 23.06.2009 - VI ZR 196/08

□ 사실관계
- 소송 당사자들은 원고의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음
- 웹사이트(www.spickmich.de)에서 학생은 교사의 이름을 밝히고 그의 수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피고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자임
-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는 오로지 등록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할 때 학교 명, 학교 소재지, 아이디(ID)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를 하면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비밀 번호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음
-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기재를 해야 하는 평가는 소위 '멋지고 유머가 있는(cool und witzig)', '인기가 좋은 beliebt)', '학생들에게 의욕을 느끼게 하는(motiviert)', '인간적인(menschlich)', '냉정한(gelassen)', '강의를 잘하는(guter Unterricht)'와 같이 사전에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개개인 이 개별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익명으로 행해지는 평가의 평균에 따라 전체 성적이 산정되며, 이 외에 이용자에 대한 평가 대상인 교사와 관련한 사례 등을 기술할 수 있음

□ 판결요지
- 2009년 6월 23일 연방 대법원은 그 동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판결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www.spickmich.de’에서 행해지는 학생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표명하지 아니하였음
-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교사의 정보와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와 비교 형량을 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금지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음(Az.: VI ZR 196/08)

Ⅳ 국외 이슈

1 영국 표준협회(BSI), 「개인정보관리표준(BS 10012: 2009)」제정

□ 배경 및 경위

○ 2009년 6월 2일 영국표준협회(BSI)는 영국 최초로 「개인정보관리 표준(BS 10012: 2009 Data Protection - Specification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제정

□ 표준의 주요내용

○ 공공 및 민간 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개인정보법(DPA)」을 준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PIMS)에 대한 요건을 특정
○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훈련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위험 평가, 개인정보 공유절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에 관한 지침 포함

□ 본 표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본 표준을 통하여 각 기관들은 그들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하는 개인정보관리와 관련된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 영국에서, 본 표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기관별 개인정보보호관리사에 관한 감사보고서(Legal bill)에 의존하여 각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나, 본 표준 제정을 통하여 각 기관들은 감사보고서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정보보호관리 현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국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진작될 것으로 기대

유럽회의(COE),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채택

□ 배경 및 경위

○ 2009년 5월 29일 범유럽 정부간 협력기구인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47개 회원국 장관 및 대표는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Resolutions on the new notion of media, critical internet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ith regard to anti-terrorist laws)」채택

□ 결의의 주요내용

○ 표현의 자유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자율규제를 지지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 콘텐츠 수집자, 검색엔진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인식해야 함
○ 주요인터넷자원이 공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법적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럽회의에 요구
○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을 마련할 것을 유럽회의에 요구
○ 반테러리스트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권력의 간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에 실패하고, 반테러리스트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절차적인 보장이 부족함을 지적 등

□ 시사점

○ 본 결의는 미디어와 인터넷에 관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과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유럽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

※출처: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5월 29일자 보도자료
1. 국내 문헌

2. 국외 문헌
[6]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5월 29일자 보도자료
정보보호 법제 동향

발행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주 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번지
연락처 02-405-4738 kis@kisa.or.kr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1호)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